

데스크시각



장필수 편집부국장·전남본부장

정치인에게 지지율은 생사여탈을 좌지우지하는 생명줄과도 같다. 특히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 등 정치 지도자들에겐 지지율이 정책 추진의 주요한 동력이 된다.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 힘을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정책을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지만 지지율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밀고 나갈 수가 없다. 지지율이 곧 민심이자 여론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 추이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적폐 청산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등을 유익적으로 추진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역대 대통령 지지율 최고치인 83%까지 올랐다. '여당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통령 지지율에 기대산다'는 야당의 비판

단체장 지지율 들여다보니...

이 있을 정도였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정착시킨 것이 지지율을 끌어올린 일등공신이었다. 하지만 경제 정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주에는 취임 후 최저인 45%까지 떨어졌다. 부정 평가가 44%로 지지율과의 차이가 1%포인트로 좁혀지면서 조만간 데드크로스(지지율이 부정 평가 밀로 떨어지는 것)에 접어들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레임덕 이야기까지 나온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그제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갖고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지지율 하락에 핵심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생명줄이자 정책 추진 동력

이제 눈을 광주·전남 광역 단체장들로 돌려 보자. 지난 11월 기준으로 지지율을 보면 17개 광역단체장 중 김영록 전남 지사가 1위, 이용섭 광주지사가 8위를 기록했다. 교육감은 장석웅 전남 교육감이 1위, 장휘국 광주 교육감이 15위다. 광주 단체장이 낮고 전남 단체장이

높은 것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시권 주민과 덜 민감한 농어촌권 주민의 차이가 작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5~10위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16년 만에 도시철도2호선 건설 논란에 중지부를 찍고 균공향을 포함해 광주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성과를 냈음에도 최대 현안인 광주형일자리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휘국 교육감의 지지율 최고 하위는 3선에 따른 피로감에 지식 교육에 따른 학력 저하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과 최근 사립학교의 성 비위 사건 및 성적 조작 파문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전남 단체장들이다. 초선인 장석웅 교육감은 취임 후 줄곧 지지율 2위를 달리다 11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학교 자율성 확대와 학생·교실 중심의 교육 혁신 정책이 공감을 얻은 탓일 게다. 장 교육감은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파격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비록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과감한 규칙 개정 추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 지사가 소신을 갖고 국내 첫 영리병원

을 허가해 지지율 5위에서 2위로 올라선 것처럼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적극적 업무 수행 절실하다

상식적으로 별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김영록 전남 지사의 지지율이다. 김 지사는 취임 후 5개월 연속 전국 1위를 지키고 있다. 취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이렇다 할 브랜드 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의아할 정도로 높은 지지율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락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지방 선거 득표율(77.1%)과 지지율(58.2%) 간 격차가 18.9%로 벌어져 있기 때문이다. 득표율과 지지율 격차를 감안하면 김 지사의 순위는 10위에 해당한다.

김 지사가 고공 지지율을 지키려면 이제부터 과감한 추진력으로 특색 있는 정책을 펴 나갈 필요가 있다. 당장 내년 초부터 닥칠 광주·전남 상생 과제인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 한전공대 입지 선정은 물론 1차 선정에서 실패한 스마트 팜 유치전이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

/bungy@kwangju.co.kr

社說

호남 속원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배려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사업 선정을 앞두고 낙후된 호남의 주요 사업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타 조사를 거칠 경우 경제성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인구가 적은 호남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각 시도가 추천한 예타 면제 사업을 검토해 국가 균형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전국에서 추천된 사업은 모두 37건에 이르며 각 시도는 자신들이 신청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을 펴고 있다.

광주시는 인공 지능 분야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 균형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광융합산업 혁신 플랫폼 구축'(8000억 원) 사업을 신청했다. 전남도는 원도-고흥 간 해안

관광도로(9008억 원)와 여수 화태-백야간 연도교(5277억 원), 신안 압해-해남 화면 간 연도교(4828억 원) 등을 요청했다. 이들 사업은 광주·전남 산업 발전을 이끌 대형 프로젝트들이지만 예산 규모가 커 시도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안들이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필수적이다.

호남은 그동안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차별과 소외를 받아 왔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예타 면제 사업 69건 가운데 40.6%(28건)가 영남에서 진행됐고 호남은 11.6%(8건)에 불과했음 정도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사업 선정에서는 광주·전남 도가 요청한 속원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 균형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광융합산업 혁신 플랫폼 구축'(8000억 원) 사업을 신청했다. 전남도는 원도-고흥 간 해안

보훈처,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해야

국가보훈처가 최근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전남 시도민들을 참혹하게 진압한 계엄군경 가운데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56명은 적절한 심의도 없이 유공자로 지정된 데다, 30명은 지금까지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한다. 참으로 아이러는 일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 계엄군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65명이었다. 전몰(전투 중 사망) 군인이 22명, 순직(업무 중 사망) 군인 1명, 전상(전투 중 부상) 군인 35명, 공상(공무 수행 중 부상) 군인 7명, 그리고 경찰 순직 4명, 공상 4명으로 집계됐다.

한데 이중 1989년 이전에 유공자로 지정된 56명은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5·18 계엄군경 30명 중 영관급 군인이 4

명, 위관급 군인이 1명으로 확인됐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똑같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국립묘지에 함께 묻히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보훈처가 아직도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등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취소 계획에 대해서 묻자 '국방부와의 협의' 등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의 명령 체계에 의한 일부 계엄군의 억울한 죽음도 물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국가유공자 지정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한 것은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일이며 역사 인식에 대한 오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훈처는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역사적 사실에 맞게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은폐칼럼

마음이 이우는 까닭



고성혁 시인

비가 내리면 좋겠다/ 비가 내려 대지를 적시고/ 그 안에 담긴 씨앗들이 무사히 땅을 뚫고 나와/ 푸르게 이파리를 올리면 좋겠다// 비가 내리면/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 마당귀에서 뽀뽀뽀뽀 발을 씻고/ 마루에 올라앉아 하늘을 볼 것이다/ 집을 떠난 자식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공장이나 회사에서/ 혹은 거리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그리거나/ 그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 애썼던 날들의/ 노고를 이루어만질 것이다// 휘어어 휘어어/ 발귀둥이 허수아비 그늘에 앉아/ 씨앗을 쪼려는 새들과 세상을 향해/ 땀방울의 검은 얼굴과 손으로/ 더 이상 손을 흔들지 않을 것이다/ 비가 내리면// 할머니는

구부정하게 허리를 숙이고/ 축축이 젖은 몸으로/ 집으로 돌아 갈 것이다/ 비가 내리면/ 할머니는 (졸시 '비가 내리면' 전문)

제가 사는 시골에는 제 어머니를 닮은 할머니 몇 분이 계십니다. 그중 한 분이 곧 마을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홀로 사는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신 아드님이 큰 도시로 모시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사시던 집을 매물로 내놓고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옮겨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다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과 같지 않을 도시 생활에 잘 적응할 것인가 어찌지 염려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잘 해 주더라도 노인들이 대도시에서 살면서 느껴야만 하는 감정은 특별하게 마련이지요. 그분들이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도무지 피하고 싶은, 가능하다면 겪고 싶지 않은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더욱이 떠나신다는 것 할머니는 지난 여름 풍발의 새를 쫓기 위해 이녁이 만든 허수아비 그늘 밑에서 휘어어 휘어어, 손을 흔들며 한 계절을 보내신 분입니다. 그까짓 콩이 무어 대수

냐고, 돈으로 따지면 몇 폰이나 되느냐, 제 말에 할머니는 "뭘, 특별할 일도 없고...!" 라며 새카매진 얼굴로 웃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아 할머니의 삶을 헤아리며 이 시를 썼습니다. 노는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들의 어머니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에 더 어울리는 그 할머니의 감성을 생각하면 제 걱정이 마냥 기우라고만 할 수 없겠지요.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할머니는 주차장에 차를 대는 저를 보더니 감을 따 주겠노라고 구부정한 허리로 장대를 가져 오셨습니다. 커다란 갈나무 밑 골터가 마를 주차장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상황을 예견치 못하고 그대로 차 옆에서 있었는데 할머니가... 장대를 높이 드시더니 갈나무 가지를 치셨습니다. 후두둑, 흥시들이 요란하게 떨어졌습니다. 흥시들은 차창과 차 지붕, 제 머리 위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계단 프라이처럼 넓게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멧떡은 듯 서 있다가 제 머리를 보더니 크게 웃었습니다. 우하하하. 그리고 "머리에 감이 떨어졌

어, 꼭 파마한 것 같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저도 할머니를 따라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날 나는 도시를 떠나고 싶었던, 삶이 내게 짐 지워 무겁기만 했던 그때까지의 번민과 회한이 조금은 날아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에도 할머니는 개울 건너에서 제 집 마당으로 감을 던지셨습니다. 어깨에 힘이 없어 팔꿈치 아래, 손과 팔뚝만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며 던지시는 노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연민을 동시에 느꼈던 기억들이 동화처럼 아련합니다. 할머니는 것처럼 우리의 시골살이를 안착시켜 준 가이드였네요. 할머니의 이사는 지난해 병환으로 서울 아들집에 가셨다가 주검으로 돌아오신 또 다른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켜 제 마음을 겨울 새벽처럼 침울하게 합니다.

이렇듯 어느 것 하나 단순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이라니. "모든 것들은 오고 가고 또 온다."는 카프카의 말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마음이 저녁녘처럼 이슬입니다. 아무쪼록 할머니가 어디서건 오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조속한 정착의 길



한기민 호남대 초빙교수·전남도 경유회장

지난 11월 13일 대통령소속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이하 자치경찰특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특위가 발표한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 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 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현재의 경찰 운영과는 조직 체계, 업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진 부분이 수두룩하다. 우선 경찰 조직 체계에 있어서 지방경찰청에 '자치경찰본부'와 경찰서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며,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 경찰의 36%인 4만 3000명이 자치경

찰로 이관되며, 현재 112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로 정보 공유와 신고 출동 관련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사·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하면서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을 꾀하고 자치경찰 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사·도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 기초자치단체와 상호 연계성을 증진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인사 교류와 교육 훈련 등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업무면에서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 밀착 민생 치안 활동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방해사범 등의 수사를 담당한다. 반면 국가경찰은 정보·보안, 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 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 보존·범인 검거 등 중동 조치를 국가·자치 경찰의 공동 의무 사항으로 규정해 사건 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사·도 경찰위원회'를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하되 사·도지사의 경찰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 방지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지역 치안 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민주적 경찰 운영이 가능하리라는 점에서 사투 기대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인사 교류와 교육 훈련' 등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자치경찰은 국가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되므로,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 장비는 자치경찰과 공동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신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점도 바람직스럽다 하겠다. 시행 측면에서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우선 2019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치경찰 사무 50%), 2021년 전국 일부 시행(자

치경찰 사무 70%), 이후 2022년 전국의 모든 17개 광역자치 단체(자치경찰 사무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본안은 제주도 특별자치경찰이 국가 대비 8%에 불과한 인력 규모, 수사권이 없는 순찰, 예방 중심의 제한적 권한 등 초기 이관 인력에 한정된 자치경찰의 수행에 한계가 있었음을 감안해 국가 대비 자치경찰 인력을 36%까지 대폭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역 민생 치안 관련 사무 이양 및 관련 수사권 부여, 국가 재정 부담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새로 도입될 자치경찰제가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의 치안 수준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점을 전 세계가 인정하는 현실에서 주민 밀착 치안을 하고자 하는 본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또한 인사권의 이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은 자치경찰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지역 치안의 안정화를 가하는 일일 것이다.

無等鼓

에베레스트로 가는 길목인 팽보체에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학교'가 있다. 그 곳은 해발 4000m가 넘는 고지대이기 때문이다. 2014년 1월, 네팔 쿼부 히말라야 트레킹을 갔을 때 목격적인 칼라타르(해발 5550m)를 찍고 하산길에 이곳에 들었다. 학교는 단층 건물로 단출했다. 그러나 교실 네 개와 운동장·강당·도서관·화장실·양호실까지,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었다. 설산이 파노라마로 빙 둘러싼 주변 풍광은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이런 고지대에 누가 학교를 지었을까? 바로 히말라야 8000m급 16

지역 열여섯 곳에 학교를 짓겠다는 프로젝트를 세웠다.

드디어 2007년, 임흥길휴먼재단을 설립하고 네팔 오지에 학교를 짓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건설 현장까지 자재를 운반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경비행기로 루크라 비행장(해발 2800m)까지 건축 자재를 옮긴 후 인력과 야크를 이용해 어렵사리 3박4일간 운반해야 했다. 2010년에 '1호' 팽보체를 시작으로 타르푸와 롬비니, 비레탄티에 속속 학교가 들어섰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열다섯 번째 학교가 완공된다.

최근 임흥길휴먼재단 좌 완등으로 널리 알려진 산악인 임흥길 대장(임흥길휴먼재단 상임이사)이다. 임 대장은 왜 이런 험지에 학교를 지었을까? 사연이 있다. 그는 1986년 에베레스트에 제1회 등정했다 큰 사고를 당했다. 그를 돕던 셰르파 술림 도르지가 크레바스(빙하 갈라진 틈)에 빠져 사망한 것이다. 팽보체에는 죽은 셰르파의 할머니와 결혼한 지 3개월된 신부가 있었다. 임 대장은 그 마을을 지난 때마다 '뭔가 도움을 주어야겠다' 다짐했다. 이후 16차 등반을 마친 임 대장은 팽보체 등 네팔

아름다운 약속

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재단은 그동안 네팔 오지에 열여섯 개 학교를 짓는 '휴먼스쿨' 뿐만 아니라 네팔 대지진 구호 활동, DMZ 평화 통일 대장정 등 여러 프로그램을 펼쳐 왔다. 임 대장의 '아름다운 약속'은 네팔 오지 어린이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변모시키고 있다. 연말에 주변에서 자신과의 '아름다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눔' '봉사'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이들이 많이 보고 있다. /송기문 문화2부장 song@

Table with Kwangju Ilbo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